

 방통위원회		<h1>보도자료</h1>		<i>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</i>	
보도 일시	2022. 9. 1.(목) 11:00	배포 일시	2022. 8. 31.(수) 15:00		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 김미정 (02-2110-1560)	담당자	사무관 허성희 (02-2110-1549)

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‘잊혀질 권리’ 를 위해 관계부처 한 자리에 모인다

- 방통위, 법무부, 여가부, 검찰청, 경찰청 등 5개부처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-

- 방통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, 이하 방통위)와 법무부, 여성가족부, 검찰청,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‘잊혀질 권리’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(과장급) 제1차 회의를 9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였다.
-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’ 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 -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 부처는 ▲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, ▲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, ▲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, ▲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, ▲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《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‘잊혀질권리’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(과장급) 구성 》



- 이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“엔(N)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으나, 최근 발생한 일명 ‘엘 성착취물 범죄’ 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” 이라고 말하면서,
 - “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‘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’ 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‘민·관 협의회’ 도 구성·운영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 끝.

